

## 일본의 「신 우주기본계획」

- 일본 정부는 우주개발에 관한 정책 방향을 담은 「신 우주기본계획」을 발표
- 신 우주계획에는 안전보장과 산업 이용에 더욱 중점을 둔 구체적인 목표와 개발 일정을 제시함으로써 민간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방침

### □ 미일관계 등 안보를 중시한 계획

- 일본 정부는 '15.1.9 우주개발전략회의를 개최하고, '24년까지 일본의 우주 정책을 담은 「신 우주기본계획」을 결정

#### < 신 우주기본계획 주요 내용 >

- 핵심 내용은 우주 공간을 평화 이용에 국한했던 기존 방침에서 안보분야까지 이용하겠다는 방침
- 우주 개발의 선진국인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여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
- 신 계획에는 미일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위성을 연계하여 우주 감시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전략
- 신 계획은 인공위성을 활용한 선박 감시나 정보 수집, 우주시스템을 안보 목적으로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
- 민간 우주산업 규모를 10년간 5조 엔으로 확대, 관련 산업의 해외 전개를 검토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도 설치

#### 안전보장 이용 확대

- 우주시스템을 외교·안보, 자위대 운용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
- 현재 1기뿐인 「준천정위성」을 '23년도 까지 7기로 확대
- 기밀이 높은 방위위성 통신망을 자위대가 독자적으로 운영
- 정보수집위성의 증가와 기능 강화
- 민간사업 추진에 필요한 법안을 '16년 정기국회에 제출

#### 미일 협력 강화

- 우주 쓰레기의 감시 강화
- GPS 고장·공격으로 무력화된 경우 상호 보완

#### 산업 육성

- 국산 기간 로켓으로 향후 10년간 위성 등 44기 발사·운용
- 신형 기간 로켓(가칭 「H3」) 개발
- 향후 10년간 관련 산업을 민간 5조 엔 규모로 확대 (현재 연간 약 3,000억 엔)

- 우주 관련 기업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용이한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개별 위성이나 로켓마다 발사·정비시기를 표시한 일정표도 작성
- 일정표는 우주정책위원회가 진척 상황을 점검하여 매년 수정

- 아베 총리의 지시로 계획 및 일정표에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
- '21년까지 기한인 국제우주스테이션(ISS)에 대한 일본의 참여 연장에 관해서는 다른 국가의 동향을 고려하여 '16년 말까지 결론을 내릴 예정

## □ 우주 산업의 육성 추진

- 일본 최초의 우주기본계획은 '08년 시행된 우주기본법에 따라 '09년에 책정, 재해, 지구환경 문제, 국토관리, 자원탐사 등 사회 수요에 활용
- 기존의 우주계획은 연구개발이 중심이었으나, '13년 검토된 기본계획은 우주 공간 이용 추진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산업 진흥 전략을 강조
- '13년 검토된 계획에서는 5년간으로 했었지만 '15년 신 계획은 민간 투자 촉진 등을 고려해 10년간으로 설정

### < 일본의 우주정책 동향 >

2003년	핵심기관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설립
08년	우주기본법 시행
09년	우주기본계획 책정
12년	방위연구도 허가된 개정 JAXA법 통과, 시행 내각부 우주전략실과 우주정책위원회 출범
13년	우주기본계획 재검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설치
14년	국가안전보장국 출범 아베 총리, 우주기본계획 재검토 지시
15년	신 우주기본계획 수립

- 최근 일본의 우주 산업은 침체되고 있었지만 새로운 계획 책정으로 산업 강화와 안보분야의 우주 이용이 늘어나 기업의 투자 증대가 기대
- H2A 로켓을 개발한 미쓰비시중공업 관계자는 “환경 변화에 맞추어 기업의 활용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고 평가
- 위성개발 기업인 NEC는 “우주 개발에 대한 장기 일정 제시는 우주산업의 기반을 확대할 수 있어 환영한다”고 평가
- 일본 기업들은 H3는 발사 비용을 1/2로 낮출 수 있어 구미와 경쟁하는 발사 비즈니스에서 우위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
- 현재 1기인 ‘준천정위성’이 7기 체제가 되면 독자적인 GPS를 확립시켜 농업기계의 자동화, 자동차의 무인 운전 등이 가능
- 농업기계나 자동차 등 우주와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는 산업까지 비즈니스 기회가 확대

## □ 시사점

- 이번에 개편된 신 계획의 핵심은 우주를 안보 목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전략 전환으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
  - ‘69년에 우주 이용을 평화 목적으로 국한하겠다는 국회결의를 채택하고, 군사 목적의 이용을 금지해 왔지만 ’08년 우주기본법에서 안보 이용 문구를 삭제
  - 내각부가 ‘14.11월 정부안에 대해 퍼블릭 코멘트를 실시, 3주 만에 400명\* 720건의 의견을 접수했는데 “우주의 군사 이용에 반대, 평화 이용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68건
    - \* 연령별로는 40~60대가 약 50%, 소속별로는 민간기업·대학 등 교육관계자가 약 40%
  - 내각부는 “(68건을 제외한) 약 90%는 신 계획 내용에 긍정적”이라는 결과를 언급
- 우주항공 산업이 취약한 우리는 일본의 우주산업에 관한 성장정책과 산업육성과정을 참고할 필요
  - 일본의 우주항공 산업이 발전하게 되면 관련 산업분야에서 한일 협력이나 일본시장으로의 진출도 기대됨
- 이번 계획은 일본의 중국 견제 강화로 중일 관계의 악화는 물론 한중일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전체가 긴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본의 우주개발 동향을 주시할 필요

## &lt;참고자료&gt;

닛케이신문(2015.1.9/10), 아사히신문(2015.1.9), 마이니치신문(201.1.9)